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새 이데올로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이유민

1. 서론
2. 전쟁의 국내 요인으로서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그 영향
3. 권위주의하에서의 새 이데올로기
4. 『자유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러시아의 권위주의
5. 결론: 러시아의 권위주의 및 패권주의의 전망

1. 서론

이 글에서는 19세기 영국에서 출판된 이래 자유 민주주의의 영원한 고전이라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을 읽고 러시아의 권위주의에 대해 분석해보려 한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으로서의 권위주의와 푸틴 정부가 새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는 러시아식 자유주의에 대해 『자유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새 이데올로기를 향한 욕망을 가시화했다. 러시아식 자유주의라는 새 이데올로기의 이면에는 패권주의와 권위주의가 숨어있다. 러시아는 권위주의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고,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권위주의를 택한 셈이 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푸틴의 집권으로 새 이데올로기가 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이번 전쟁으로 그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2. 전쟁의 국내 요인으로서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그 영향

지난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의 오랜 갈등에서 기원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서유럽, 미국 등)의 입장은 ‘러시아의 일방적이고 반인륜적인 침략’으로 설명된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즉 ‘탈서구화’를 목표로 하며 서방과의 대리전을 암시하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칭을 고집한다.

전쟁의 주요인으로 러시아 외부적 요인이 흔히 거론된다. ‘크림반도 분쟁으로 최고조에 달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러시아 국익 간의 충돌’이라는 것이 중론이다.¹⁾ 그러나 러시아 국내적 요인 역시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1)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37(2), 2022, 1-33.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통해 ‘러시아 내부의 발전 및 사회 단결’ 과 ‘서구에 대한 승리’ 라는 외부적 목표의 상호 발전을 꾀하는 움직임이라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껏 세계 질서가 자유주의를 통해 선도되어왔다면, 러시아 정계는 이와 반대 노선을 채택함을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했다. 러시아는 서구에서 탄생한 발전모델과 가치에 반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 그리고 동방을 향한 NATO, EU 팽창에 맞서 유라시아 국가들을 결집한다. 동시에 러시아 내부의 반정부적인 양상들을 더욱 통제하고자 한다.

물론 러시아가 ‘자유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러시아식 자유주의’ 를 주장한다. 푸틴과 카라가노프를 필두로 한 러시아 정계는 서구식 민주주의 작동에는 ‘적’ 이 필요하며, 러시아에 대한 체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²⁾ 러시아에게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란, 각종 이익 산출과 패권주의를 위해 철저히 서방 중심으로 설계되고 부과된 체제일 뿐이다.

카라가노프가 RT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³⁾ 또다시 몰락과 부상이 반복되려 한다. 2차대전 이후,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 전세계를 장악한 서구발 자유주의 질서는 이제 붕괴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 아랍의 봄, 브렉시트,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자유주의 노선에 이르러 더욱 심화하였다. 러시아 역시 그 일례로, 유라시아 권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막강한 권력과 질서의 상징이었던 미국, EU, UN 등의 압박을 무시하고 독불장군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질서 붕괴의 여파로 세계 경제난이 가속화되고 곳곳에 전운이 감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강행 역시 ‘구질서의 와해’ 의 상징으로서 러시아 내외에 기능할 것이라는 저의가 보인다. 2022년 8월 현재, 전쟁의 판세가 예상을 비껴가고 러시아의 어려움도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러군의 ‘무리수’ 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전쟁을 ‘서방과의 전쟁’ 이라는 대리전으로 규정할 채 기존 질서의 몰락과 러시아 중심 새 체제의 수립을 보이겠다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국 패권주의로 관철되는 일방적인 세계⁴⁾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3. 권위주의하에서의 새 이데올로기

러시아는 새 이데올로기로 기존 서구의 자유주의 질서와 다른, ‘진정한

2) Anna Mahjar-Barducci, “Contemporary Russian Thinkers Series (Part I): Renowned Russian Academic Sergey Karaganov On Russia And Democracy,” Inquiry & Analysis, No. 1480 (October 2019), p. 3

3) *Ibid.*

4) 강봉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러시아의 주권적 국제주의」, 슬라브 연구, 35(4), 2019, 1-33.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2019년 6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지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푸틴은 ‘자유주의는 그 효용을 다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헝가리 오르반 총리, 이탈리아 살비니 부총리, 영국의 브렉시트 등은 반제도적 성향으로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⁵⁾ 카라가노프 의장 역시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고 있으나, 1991년 이후 서방이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자유주의 질서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서도 아니’⁶⁾라고 하였다. 서방 주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반박하며, 이것을 NATO나 EU를 필두로 러시아 및 주변국에 ‘강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모순되게 통제적이고 침략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푸틴 정부가 현 국내 체제를 ‘주권 민주주의’라 부르는 것과 달리, 반푸틴 세력과 러시아 외에서는 이를 ‘권위주의’로 바라본다. 푸틴의 러시아를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근거해 167개국의 정치체제를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푸틴 통치 아래의 러시아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⁷⁾ 그러나 이번 전쟁을 오로지 푸틴의 독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번 전쟁을 ‘서구식 발전모델과 자유주의 질서에 반한 전쟁의 시작’으로도 바라본다. 푸틴의 지지율이나 지정학적 이익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국내적인 체제 전환만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서구식 관습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새 이데올로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카라가노프는 과거 ‘사고의 자유에 대한 공산주의적 야만적인 제약’이 소련의 붕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새 이데올로기’는 각종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며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다.⁸⁾ 그러나 푸틴의 권위주의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조차 명목상의 것이다. 1993년 러시아 헌법 채택 이래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존재하지만, 푸틴은 집권 연장의 발판으로 임기 관련 헌법 조항을 수정했다.⁹⁾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수정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아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의 불가침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는 삼권분립의 궁극적 목적인 ‘통치권의 분산과 자유 수호’ 역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권위주의하에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러시아식 자유주의’라면, 그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다.

5) 김성진, op. cit.

6) *Ibid.*

7) 정희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와 삼권분립」, 국제정치연구, 23(3), 2020, 125-158.

8) 김성진, op. cit.

9) 정희석, op. cit.

카라가노프가 러시아를 ‘적’으로 세워 작동한다고 비판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처럼, 러시아 역시 서구를 절대 악으로 삼아 푸틴의 권위주의를 유지하려 한다는 모순이 있다. 즉 러시아는 소련과는 다른 ‘새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만 냉전기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고방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전쟁은, 승패와 관계없이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고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EU 가입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이는 2014년 무렵 크림반도 강제 합병 때 예견되었듯이 러시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다.¹⁰⁾

4. 『자유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새 이데올로기

“집단적 의미의 서구와 대결하는데 불가피한 정치적 자유의 제한은 지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렵지만 달성할 수 있다. 국민들 가운데 재능있고 창의적이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역사는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부과되었던 사고의 자유에 대한 야만적인 제약이 소련을 폐허로 이끌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떤 국가의 발전에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¹¹⁾

카라가노프의 말처럼 러시아는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점으로 새 이데올로기에서 자유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한다. 이에 덧붙여 러시아가 제안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서방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자유주의적 수정 규범들의 일방적 적용 반대, 일방주의적 세계 대신에 다자주의적 세계,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여러 비서방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중심적 세계 질서의 형성으로 설명된다.¹²⁾ 그러나 진정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 다자주의적 세계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를 꿈꾸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존 스튜어트 밀은 권위주의하에서 자유주의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세 번째 이유이자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미 비대한 정부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벌써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권한을 덧붙인다면, 사람들이 품는 희망과 불안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활동적이고 야심만만한 시민들을 점점 정부 또는 집권을 꿈꾸는 정당의 눈치나 보는 존재로 전락시킬

10)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4), pp. 1-12

11) 김성진,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2) 강봉구, op. cit.

것이다. (……) 아무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의회 제도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나라들을 이름뿐인 자유 국가 이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¹³⁾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정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독재정권들을 연상시키는 정권이다. 또한 이번 전쟁의 언론 보도에서도 인터넷 검열부서인 러시아연방 정보통신기술 및 대중미디어감독국(Роскомнадзор)의 검열이 이어졌다.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칭 이외에 ‘공격’, ‘침략’ 등 부정적 단어의 사용을 금했다. 이처럼 검열과 통제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반푸틴 야당 세력이나 엘리트들을 억압하는 데 열중이면서 자유주의를 선택하려면 지금까지의 권위주의를 포기하는 방법뿐이다. 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러시아 시민사회는 경직되었다. 개인이 스스로 권리를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정부 휘하에서 개인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희망과 불안을 모두 정부에 위탁하게 했다.

즉 보통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있고 야심 찬 사람들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일만 생기면 관료들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런 관료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그리고 일단 편입되고 나서는 또 신분 상승을 피하는 것이 희망의 전부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관료 조직 바깥의 일반 시민들은 실무 경험이 없는 탓에 관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거나 견제하기가 어려워진다.¹⁴⁾

정부가 개인과 개별 조직의 활동과 권한을 복돋우는 대신 그들이 할 일을 정부의 활동으로 대체해버리고, 정보를 주고 충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야단도 치는 대신 족쇄를 채워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할 일을 당사자는 내버려둔 채 직접 해버릴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국가의 힘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에게서 나온다. (……) 온순한 도구처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왜소한 존재가 되도록 끌고 간다면(설령 그들을 위해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갈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로서는 크고 위대한 일은 전혀 성취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¹⁵⁾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시민사회를 경직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의 자주적 능력과 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의 부재이다. 개인의 능력 개발과 능동적인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자유권의 근본이다. 직접적인 억압만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방임도 자유를 제한한다.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을 확장하고 가꿔나갈 기회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방임하는 정부들이 그렇다. 정신적으로,

13) 존 스튜어트 밀(Jhon Stuart Mill),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19, p. 226

14) *Ibid.*, p. 228

15) *Ibid.*, p. 235

사회적으로 왜소해진 개인은 정부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고 순종을 택한다. 그중 정부의 사상이 주입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일부만이 관료로서 노동한다. 그리고 실무 경험도, 지식도 없는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일생의 대소사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정치’ 라는 울타리의 밖으로 추방된다.

러시아에서 추구하는 단결과 통합은 일반적인 자유주의에서 바람직한 시민들 간의 연대가 아니라 오직 ‘정부를 향한’ 충성이다. 정부는 본토의 민족이 겪었던 수난과 영광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서방 세력이라는 공공의 적을 세우고, 그 아래 국민을 집결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이 권위주의 유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미 입증되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은 물론이고, 과거 우리나라의 반공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국민 가운데 재능있고 창의적이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보장’ 해주겠다면서 검열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을 정부에 종속시켜놓는 지금을 유지한다면 새 이데올로기,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결국 권위주의의 답습에 불과할 것이다.

신념이 사라지면서 회의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넘쳐나는 시대-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보다는 그런 생각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음을 더 확신하는 시대-로 묘사되는 오늘날, 어떤 한 의견이 사회에서 공격 받을 때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그 의견이 옳아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사회의 복리를 위해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이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을 충족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한다면, 정부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동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¹⁶⁾

푸틴 집권 2기(2004년)는 소련 시기 대중을 지배했던 신념이 붕괴되고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 혼란, 유럽에 대한 소외감과 회의주의가 만연한 무렵이었기에 국내외 정책으로서 주권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푸틴은 반서구 정서를 사회의 복리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푸틴 정부의 과감한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회의에 빠진 이들 앞에서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해 포퓰리즘을 활용할 수 있었다.

밀은 대중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중은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이라면 정부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동해도 무방하게 느낀다.’ 대중의 복리에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맞추는 것이 아닌 그 반대를 시행함으로써, 푸틴 정부는 밀이 언급한 대중과 정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 *Ibid.*, p. 60.

5. 결론: 러시아의 권위주의 및 패권주의의 전망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유럽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유럽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정치경제 모델을 반영해 유럽 사회로의 편입을 바랐다. 그러나 유럽에게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기대가 좌절되자 러시아는 반서구주의를 동인으로 하는 주권적 국제주의를 선택했다.¹⁷⁾

이것은 러시아를 선두로 하고 BRICS나 SCO 국가들이 함께하는 노선이다. 이들은 러시아인 그리고 비서방 국가들이 유럽에 느끼는 소외감을 공유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구 세력에 맞서는 ‘대안적인 세력 중심’¹⁸⁾을 만들고 싶어 했고, 여기에 슬라브 정체성을 깊게 공유하는 우크라이나는 필수였다. 그러므로 EU의 동진정책에 가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행보는 러시아의 ‘주권적 국제주의이자 신패권주의’에 큰 방해 요소였다. 즉 이번 전쟁에서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적 이해관계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러시아의 패권주의 노선에 대한 야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주권적 국제주의는 푸틴의 주권 민주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는데, 주권 민주주의가 권위주의가 되었듯 주권 국제주의 역시 패권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존 서방의 패권주의의 산물인 각종 병폐들을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러시아가 내세우는 자유주의도 결국 권위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발전 원리는 자유를 사랑하든, 아니면 개선을 사랑하든, 그 형태에 관계없이, 관습의 횡포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관습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지 않으면 발전 원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 인간 역사를 규정하는 기본 변수가 된다.¹⁹⁾

유럽이 지금까지 이런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유럽 민족으로 하여금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 결국 내가 볼 때, 전진하는 경로를 여럿 가지고 있었고 다면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 전적으로 이 덕분에 유럽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벌써부터 이 소중한 자산을 멀리하고 있다.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려는 중국식 이상을 향해 무섭게 나아가고 있다.²⁰⁾

상기한 밀의 견해에 따르면, 확실히 전쟁 이전 러시아의 주권 국제주의 정책은 낡고 부패한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개혁하기 위한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러시아의 주권 국제주의가 이면에는 패권주의를 품고 있어도, 지금의 서구 중심 질서 역시 결국 미국과 유럽의 패권주의로 뒷받침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진보

17) 강봉구, op. cit.

18) *Ibid.*

19) 존 스튜어트 밀, op. cit., p. 152.

20) *Ibid.*, p. 153-54.

와 개혁은 필수요소가 맞다. 러시아의 새 이데올로기를, 한 시대를 풍미한 사조가 가라앉고 새로운 사조가 부상하듯이 관습의 굴레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관습을 낳는, 역사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들의 새 이데올로기의 모순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으며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실패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무엇보다 밀은 개선의 정신과 자유의 정신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개선을 원치않는 사람에게 개선을 강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의 정신은 그런 강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진보, 개혁 등이 ‘자유’의 동의어가 될 수는 없으며, 자유에 선행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빼앗는 전쟁은 개혁, 진보 따위의 명목을 붙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방을 ‘악의 세력’으로 설정하고서 그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한다는 말로 전쟁이 아닌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주는 지정학적 이익과 러시아 주권 국제주의의 확장을 포기하지 못한 것 뿐이다. 서구의 자유주의가 편향적이고 선동적이며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전쟁을 택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졌다. 따라서 푸틴의 주권 국제주의 정책은 더 이상 ‘개혁’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패권주의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봉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러시아의 주권적 국제주의」, 슬라브 연구, 35(4), 2019, 1-33.
-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37(2), 2022, 1-33.
- 정희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와 삼권분립」, 국제정치연구, 23(3), 2020, 125-158.
- 존 스튜어트 밀(Jhon Stuart Mill),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19.
- Anna Mahjar-Barducci, “Contemporary Russian Thinkers Series (Part I): Renowned Russian Academic Sergey Karaganov On Russia And Democracy,” Inquiry & Analysis, No. 1480 (October 2019), p. 3.
-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4), pp. 1-12